

# 《국정원개혁》놀음의 정체

평양출판사  
주체102(2013)년

지난해 12월 《국정원》은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민심을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비렬한 막후공작을 감행하였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 진상이 드러나 남조선전역을 거대한 초불의 도가니로 들끓게 하고있는 《국정원정치개입사건》이다.

《국정원정치개입사건》은 오늘 시간이 흐를수록 남조선정국을 더욱 혼란속에 빠뜨리고있다.

이에 급해맞은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정보원을 발동하여 권력을 탈취한 저들의 비렬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 사건의 진상을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온갖 교활한 술책을 다 꾸며내고있다.

《국정원개혁》놀음은 그 일단이다.

그러면 보수집권세력이 벌려놓고있는  
《국정원개혁》 놀음의 기만적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파헤쳐보기로 하자.

## **도마우에 오른 《국정원》**

지난해 12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  
통령선거》는 진보와 보수, 민주당후보와  
《새누리당》 후보와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진행되었다.

보수세력은 저들이 내세운 후보가 여  
론조사에서 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를 압도적으로 누르지 못하자 언론은 물  
론 관련까지 총 발동하여 여론몰이에 나  
섰다.

그것은 선거당일인 12월 19일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 절정에 달하였다.

당시 《국정원》은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목적밑에 저들의 심리정보국 요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에 야당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여론을 조작하였다.

올해 6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은 흔적 조사를 통해 발견된 658개의 정보원직원들의 인터넷주소들을 자체분석한 결과 정보원이 올린 모략글은 민주당관련 180건, 통합진보당관련 319건, 기타 1 935건이라고 폭로하면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핵심은 진보정당들에 대한 중복색갈론공세를 통해 야권련대를 파괴하고 진보세력의 단결을 깨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발견된 주소들의 대부

분이 인터넷사용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색정적인 사진들로 받쳐져있었다는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선거공작이 보수 《정권》의 연장과 과거 독재시대부활을 노린 현 집권세력의 막후조종에 의해 감행되었다는 사실의 전모가 당시에는 밝혀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현 보수집권세력의 부추김밑에 감행된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책동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간단한 주택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던 《국정원》녀직원이 야당세력에 의해 덜미가 잡히게 되면서 점차 그 룬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야당측은 《국정원》의 3차장산하 심리

정보국에 소속된 녀직원 등이 상급의 지시로 3개월전부터 야당후보에 대한 비방과 여론조작을 해왔다고 하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국정원》을 즉시 경찰에 고발하였다.

당시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하여 《지난 해 11월부터 3차장산하의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격상하고 그안에 안보 1, 2, 3팀으로 명명한 3개의 팀(70여명)을 신설했다.》, 《요원들에게 개인별로 휴대용컴퓨터를 지급하고 매일 주요정치현안에 대해 게재할 글내용을 하달해왔다.》, 《국정원은 청사내부에서 다수의 요원들이 동시에 정치현안에 대한 글을 달거나 야당과 그 주요인사들에 대한 글을 다는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할 경우 IP주소추적 등에 의해 발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외부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했다.》, 《요원들은 오전에는 국정원에 출근해 전날 작업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은 이후에는 청사외부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선거개입책동을 구체적으로 폭로하였다.

대변인은 또한 정체가 드러난 《국정원》녀직원과 관련하여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난 3일동안 김모요원의 국정원근무시간은 하루 2~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극히 비정상적근무로 제보 받은 심리정보국 요원들의 근무활동과 일치한다.》고 까밝히었다. 그러면서 《국정원》녀직원의 최근 2개월간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 심리정보국 내부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등을 공개할것을 《국정원》측에 완강히 들이댔다.

이처럼 야당측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연방 터져나오자 바빠맞은 《국정원》은 꼬리가 잡힌 녀직원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원이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관계자들을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추태를 부리는 한편 《선거개입활동은 없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저들의 죄행을 어떻게 하나 모면해보려고 부산을 피웠다.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끼여들어 《무지한 비방과 네거티브에는 책임을 묻고 끝까지 밝혀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나가겠다.》,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길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이란 무하고 급기야 한 녀성을 집에 가둬놓고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물도 밥도 끓는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정말 참담하기만 하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국정원》을 적극 비호, 두둔해나섰다.

《국정원》을 선거에 끌어들인 저들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것이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이처럼 불맞은 하늘소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마구 허둥대며 날뛰었겠는가.

한편 야당과 여론의 드센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수사에 끌려나온 경찰은 진상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정보원의 범죄행위를 은폐, 축소하는데만 매여달렸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측은 사건해명의 실마리로 되는 근 80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4개로 대폭 축소하다못해 강력한 자력에 의한 자료삭제기술까지 리용하여 증거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는 《대통령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뻔뻔스럽게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조사를 일단락 매듭지었다.

이것이 《국정원》을 선거에 개입시킨것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세력을 돕기 위한 경찰의 고의적인 책동이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너직원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까지 44시간동안 집에 있었기때문에 그 시간에 증거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는것, 주소를 40여개나 써온 사실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것, 수사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 몇시간만에 서둘러 공개해버렸다는것,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의 작성자와 배포자가 서로

다르다는것을 비롯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반박해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바쁘게 마치도 기다렸다는듯이 《무고한 여성과 국가기관까지 끌어들이 대선을 흔들겠다는 야당측의 계획된 의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건은 인권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인권유린을 비호한 대사건》이라고 고아대면서 민주당에 맹공격을 들이댔다.

결국 온갖 수단과 비열한 방법을 선거에 모조리 써먹은 《새누리당》의 모략적이며 음모적인 책동에 의해 보수 《정권》은 또다시 연장되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다.

올해 3월 전 정보원장 원세훈이 《원장

님지시》형식으로 줄개들에게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모략선전을 하도록 내려 먹인것을 입증하는 《심리전강화방안》이라는것이 공개되고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사실이 폭로되었다.

4월 18일에는 정보원직원들이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고 뒤따라 경찰의 고위인물이 수사초기에 사건에 대한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것이 당시 수사에 참가한 경찰측 관계자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하여 한동안 잠잠해있던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은 다시금 여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전 정보원장 원세훈이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이 이 사건과 경찰의 사건은폐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고 원세훈 등의 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지난 《대통령선거》 결과가 훼손될수 있다는것을 뻔히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위급하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청와대는 이 사건이 리명박 《정권》 하에서 있는 일이기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왔다.

그러나 사태는 점점 험악하게 번져졌다.

그것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의 선거개입혐의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건의 초점이 저들에게 집중되고있는데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현 집권세력이 《국정원》의 비법적인 《정보모

략공작》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여론이 나돌고 지어 《대통령》당선 무효주장까지 들고나오기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지난 6월 검찰당국은 전 정보원장 원세훈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관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경찰공무원법》에 걸쳐 재판에 기소하며 지난해 《대선》때 인터넷에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들을 게재하는데 직접 참가한 전 《국정원》 3차장, 심리정보국장, 심리정보국 녀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남조선검찰은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결국 검찰당국이 발표한 수사결과라는것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은폐, 축소하고 정

보원의 모략적인 선거개입진상을 가리우며  
현 《정권》이 처한 정치적위기를 가셔주기  
위한 기만놀음에 불과하였던것이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의 수사놀음을 벌려  
놓고 《국정원정치개입사건》의 진상을 은  
폐하려고 책동한 집권세력의 기만적정체는  
다시금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은 즉시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항의  
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남조선 각  
계층은 《국정원정치개입사건》을 가리켜  
1960년의 리승만역도의 《3.15부정선거》  
(리승만역도가 부정협잡선거로 집권연장을  
피하다가 전인민적봉기에 직면한 사건)와  
1972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사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워터게이트호  
텔에서 있는 도청사건)을 뽐가하는 사건으

로, 《국기문란사건》, 《헌정과괴사건》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세력에게 사건의 배후를 끝까지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하였다.

특히 지난해 《대선》패배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정치뒤전에 물러나있던 민주당의원 문재인은 수사결과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진보련대》, 참여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각 대학의 총학생회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대검찰청청사와 청계광장 등지에서 기자회견, 초불집회를 열고 괴뢰검찰의 부당한 사법처리를 규탄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과 시국선언문들을 련이어 발표하였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활발히 벌리었다.

이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물론 검찰당국과 《국정원》을 더욱 진퇴량난에 빠지게 하였다. 바빠맞은 보수집권세력은 정보원녀직원에 대한 그 무슨 《인권유린》 문제를 걸고 늘어지다못해 나중에는 정보원장 남재준을 부추겨 로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수뇌회담과정에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서슴없이 전면공개해버리는 천하의 무도한짓까지 감행해나섰다.

원래 수뇌상봉담화록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극비로 되어있으며 남조선에서도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왔다.

그러나 권력욕에 환장한 남조선의 보

수집권세력은 이미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정보원으로부터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몰래 입수하여 선거에 써먹은것도 모자라 《국정원정치개입사건》의 불똥이 저들에게로 튀어오자 그로부터의 위기수습을 위해 담화록을 전격공개해나섰던것이다.

남조선의 력대 어느 집권자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그것도 저들에게 유리하게 마구 꾸며낸것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공개한 정보원과 보수당국의 망둥이야말로 과거 《유신》독재시기에 악명을 떨친 중앙정보부의 죄악을 릉가하는 희세의 정치깡패행위가 아닐수 없다.

뿐만아니라 가장 신성시되어야 할 북남수뇌분들의 담화록이 정보원장 남재준과 같은 한갓 정치모략군에 의해 정쟁과 당리당략의 도구로 리용된것은 실로 경악을 금

할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였으면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까지도 《정상회담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앞으로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화록을 공개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한탄을 늘어놓았겠는가.

정보원이 현 집권세력의 비호밑에 북한 관계력사는 물론 세계외교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망동을 저지른 사실이 전해지자 남조선은 순식간에 대수라장으로 화하였다.

《참여정부》시기 인사들은 《로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로무현이 합의도 하지 않은것을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버린 매국적국정원》, 《국정원은 란독증(목적이 없이 닥치는대로 책

을 읽는 독서병)환자》라고 하면서 현 《정권》과 《국정원》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정원》을 《정신나간 국정원》으로, 정보원장 남재준을 《제2의 김재규》로 낙인찍고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남재준은 자신이 무슨짓을 했는지, 국기문란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고 법적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 각계층과 언론들은 보수 《정권》의 담화록공개놀음을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쿠데타》, 《내란》, 《초법적행위》라고 지탄하였다.

특히 정보원이 공개한 담화록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원에 있는 담화록과 대조하는 과정에 그 원본이 실종되었다

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정보원과 보수당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국정원정치개입사건》으로 저들에게 초래된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오그랑수를 쓰던 《국정원》은 오히려 분노한 민심의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그를 뒤에서 조종하던 현 보수집권세력은 더욱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 **《국정원개혁》놀음의 내막**

최있는 놈 겁부터 먹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국정원》을 리용하여 《정권》을 탈취한 저들의 모략적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국정원

개혁》놀음을 황급히 벌려놓고있다.

원래 《국정원개혁》문제는 지난 6월 14일 검찰당국이 《국정원정치개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정보원장 원세훈을 구속한것을 계기로 민주당을 비롯한 각계층속에서 들고나온 문제이다.

하지만 보수집권세력은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느니,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느니 뭐니 하면서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던 현 보수집권세력이 갑작스럽게 《국정원개혁》놀음을 벌려놓은 내막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정원정치개입사건》과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로 분노한 민심을 《국정원개혁》을 통해 녹잡히려는데 있다.

다 아는바이지만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 담화록원본의 실종 등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국정원정치개입사건》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물론이고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대학생, 치과의사, 전직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 초불집회와 시국선언문발표, 서명운동 등과 같은 대중투쟁이 더욱 힘있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그러한 열기는 해외에까지 파급되어 동포들속에서 《국정원의 공작정치 세계인이 비웃는다.》, 《국정원대선개입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국정원이 뽑은 대통령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험악하게 번져지는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수수방관하다가는 집권한지 얼마 안되는 저들의 권력지반은

말할것도 없고 《대통령》당선의 불법성이 더욱 만천하에 드러나 탄핵까지 당할수 있다고 타산한 보수집권세력에게는 달아오른 민심을 달랠수 있는 새로운 주패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급기야 꺼내든것이 바로 《국정원개혁》 놀음이다.

허나 이것은 한갓 위기수습을 위한 미봉책이며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집권세력이 겉으로는 《국정원개혁》을 떠들면서도 그것을 《국정원》자체에 내맡기고있는것이 하나의 근거로 된다.

지난 7월 8일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국정원》은 《과거 정권에서부터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느니,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느니, 《국



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새누리당》도 합세하여 그 무슨 《비밀조직이라는 자체특성》을 구실로 정보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개혁》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정보원이 지난 수십년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폭력으로 억누르고 정치, 경제, 외교, 언론, 북남관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감시와 통제의 검은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각종 모략과 기만술책으로 역대 《정권》들을 뒤받침해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략의 소굴이며 음모의 본거지인 정보원에 그 《개혁》을 맡긴다는

것이 과연 될말인가.

하기에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은 몇가지 점에서 론난을 부를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것을 주문한 대목이 론난의 소지가 될수 있다.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가 국정원의 제도적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마당에 개혁대상인 국정원이 개혁주체가 되어 개혁안을 스스로 만든다는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보수 《정권》이 《국정원》에 대한 자체 《개혁》을 들고나오자마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도적에게 도적을 잡으라는 말》이라고 하면서 현 당국자에게 《되풀이되고 있는 국정원의 망동은 대통령의 의중인지 답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과거에 정치개입을 일삼고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한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말긴다는것은 타당치 않다.》，《<셀프 개혁>주문이 결국은 또다시 <셀프 정치개입>으로 귀결됐다.》，《구경군정치를 하지 말라.》，《대통령은 국정원의 불순한 정치개입을 사과하고 남재준국정원장과 관련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규탄이 터져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수 《정권》이 벌려놓은 《국정원개혁》놀음의 진의도가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담화록공개로 그 진상이

그러나 곤욕을 치르고있는 정보원에 《개혁》의 보자기를 씌워주어 민심의 분노를 어떻게 하나 녹젓혀보려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한편 보수《정권》은 《국정원개혁》을 통하여 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여기에 《국정원개혁》놀음이 민심을 업어넘기기 위한 기만 술책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을 동원하여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벌린 사실은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커다란 론란을 불러오게 되었으며 그것은 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에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현 보수《정권》은 처음 전 정보원장 원세훈이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한 범

죄적사실이 탄로나는 바람에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검찰을 부추겨 그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 형식으로 감싸주었다.

그런데 야당과 각계층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원정치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7월 2일부터 8월 15일)가 시작되자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 시작되게 되면 어차피 불구속상태에 있는 원세훈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으로 《국회》앞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을 발동하여 권력을 탈취한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선거무효》론난으로 사태가 더욱 크게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하여 보수집권세력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하게 하여 그의 입을 사전에 틀어막으려는 교활한 속심밑에 그가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아먹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퇴물수수혐의》에 걸어 전격적으로 구속함으로써 일체 외부와 접촉할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여기로부터 보수 《정권》은 《국정원개혁》놀음을 벌려놓아 정보원이 저들스스로 《개혁》을 하게 하여 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어물쩍해넘기는 한편 정보원에 쏠린 민심의 이목을 완전히 잠재우려고 획책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보수집권세력이 벌려놓고있는

《국정원개혁》 놀음의 기만적정체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수 있게 한다.

《국정원개혁》 놀음의 내막은 다음으로 정보원의 독재권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저들의 집권 《안보》 실현에 계속 씹먹으려는데 있다.

현재 《국정원》은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한 1차장과 대내정보수집을 담당한 2차장, 대북정보수집을 담당한 3차장직제로 되어있다.

그런데 《국정원정치개입사건》을 계기로 남조선 각계가 《국정원》에 대한 《개혁》문제를 완강히 주장해나서자 정보원을 통치안정의 필수적인 도구로 삼고있는 《새누리당》은 《종북》세력이 남아있는 한 2차장이 맡고있는 사회, 정치정보, 《정부》전북, 방첩, 대테로 등 대내관련기구를 완

전히 폐지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 정치 관련 정보수집업무의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야당측은 2차장직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정원》이 가지고있던 일체 모든 대내정보수집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자 보수당국은 《국정원》이 자체로 《개혁》을 하도록 내맡기면 야당과 사회 각계의 공세를 피할수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도 강화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현실적으로 보수집권세력은 정보원의 파썸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원에 《사이버테로대응총괄권한》을 부여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지금 남조선《국회》정보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상정시킨 정보원에 《사이버테



로대응총괄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사이버테로방지법안》을 놓고 여야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다.

만일 보수 《정권》의 기도가 실현되게 되면 《사이버테로》대응에 대한 총지휘는 청와대 안보실이 하게 되지만 그 실무집행은 전적으로 정보원이 맡게 된다.

이것은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지어 민간인들의 정보에 대한 정보원의 무제한한 접근을 허용하는것으로 된다. 그러지 않아도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있는 정보원이 《사이버테로대응총괄권한》까지 손아귀에 거머쥐게 되면 어떤 엄청난 후파가 초래되겠는가 하는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 각계가 정보원에 《사이버테로대응총괄권한》을 맡기는것은 《정보원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망동이라고 항

의해나서는것은 바로 이런 리유에서이다.

보수집권세력이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못 견디어 《국정원개혁》문제를 들고나오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정보원의 독재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저들의 집권 《안보》에 계속 씌먹으려는데 그 음흉한 속심이 있다.

《국정원개혁》놀음이 정보원의 독재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집권 《안보》실현에 유리하게 리용하려는데 있다는것은 그 무슨 《중북세력》에 대해 운운하면서 정보원의 정보수집기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금 보수당국은 남조선 각계층이 정보원 요원들의 《국회》 및 행정기관출입을 금지하고 정보수집기능을 대폭 축소시킬것

을 요구하고있지만 그 무슨 《중북세력》에 대해 집요하게 떠들면서 《정보수집부서들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느니, 《친북세력은 정보원의 업무대상이 된다.》느니 하는 망발을 계속 곱씹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의 이러한 비호밑에 정보원은 저들이 지금껏 《업무규정정비, 인적쇄신 등 자체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뻔뻔스럽게 고아대면서 민심을 우롱하고있다.

남조선의 야당은 물론 각계각층이 《국정원》이 남조선내부에 대한 정치개입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정보수집용으로 숨겨두었다가 그것을 정치개입에 써먹은 사실에 격분하여 《공안사건수사권폐지는 기본이고 국내정보수집권한도 없애야 한다.》，《남북정상회담대화록 새누리당에 넘겨주는 국정원은

비밀관리권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규탄하면서 《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뀌야 한다.》, 《남재준원장해임은 그 출발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있는 오늘 정보원의 정보수집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야말로 정보원의 독재권력을 그대로 보존하여 저들의 집권《안보》에 계속 써먹으려는 교활한 술책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바로 이것이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 벌려놓고있는 《국정원개혁》놀음의 진면모이다.

오늘 남조선언론들이 《국정원개혁》을 그자체에 내맡기고있는 보수세력의 행태를 두고 현 《정권》에게는 《개혁의지가 없다.》라고 준렬히 단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 《국정원》해체는 민심

오늘 정보원의 모략적인 정치개입사건을 반대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 기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 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타 오르고있는 수천, 수만의 초불이 뚜렷이 실증해준다. 그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지난 7월 19일 서울에서는 남조선 각계 총 1만여명이 대규모초불집회를 열고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한 청년련대 대표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면서 《새누리

당은 더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보원해체를 위한 반《정부》투쟁을 적극 호소하였다.

어느 한 집회참가자는 《새누리당은 지금 화불처럼 타번지는 우리의 초불을 두려워하고있다.》고 하면서 민심이 반영된 초불투쟁이 언론에 보도되는것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는 보수당국의 처사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을 데리고 투쟁현장에 달려나온 어느 한 주민은 정보원의 모략적인 정치개입으로 치르어진 지난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절규하였다.

같은 날 경상남도에서도 초불집회가 열리었다. 집회에서 경남녀성련대 상임대표는 정보원은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행

위를 하고 민주주의와 민족을 배반하였다고 규탄하면서 자식들에게 참된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남청년회 회장은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원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의 정보원 비호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날 부산에서는 《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의 초불집회와 1인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7월 27일 서울에서는 대규모초불집회가 또다시 진행되었다.

남조선 각계의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성원들과 대학생, 시민, 해외동포 등 2만 5 000여명이 참가한 이날의 집회에서 참

가자들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정보원의 정치공작에 의해 치르어진 불법선거로 낙인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각계의 항의와 요구에 따라 진행되게 된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민중을 무시하는 반역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또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현 보수당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 《사건관련자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남조선출판물 《노컷뉴스》(2013년 7월 22일)가 전한 보도를 추려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30대부부는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집회에 참석하는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고 40대의 한 참석자는 <초불집회소식이 TV방송이나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현장을 보고싶어 참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초불이 꺼지지 않는 리유중 하나가 TV방송이나 주요신문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 19일과 20일, 21일 서울시청앞 광장과 동아일보사앞에서 초불집회가 이어졌지만 KBS와 MBC, SBS 공중파 3사중 보도한 곳은 19일 SBS 단 한차례뿐이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

19일 집회에서 보니 참석자들이 들고있는 손피켓에는 <남재준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철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등의 내용이 많았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열기는 8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8월 1일부터 민주당은 정보원의 정치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제동을 걸고있는 《새누리당》과 정보원을 규탄하면서 정치개입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국정조사》정상화, 《대통령》의 사과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로 돌아가지 않을것을 주장하면서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한편 8월에 들어서면서 남조선 각계각층속에서는 대중투쟁이 더욱 광범하게 전개되고있다.

8월 3일 서울에서 진행된 초불집회를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된 《국정원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5차 국민 초불대회》에는 참여연대 등 284개의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3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초불집회 가운데서 최대규모라고 전하였다.

이날 무대에 오른 수많은 발언자들은 《국민분노만이 민주주의를 살릴수 있다.》, 《국정원은 폐강도다. 폐강도를 때려잡고 국민에게 밝히겠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것이지 녀왕을 뽑은게 아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는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작》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은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도 자기들의 손에 쥐여진 작은 초불로 보수 《정권》과 정보원의 기만술책에 의해 어두컴컴해진 남녘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히 밝히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초불집회장에서는 《대통령》의 퇴진과 《대선》불복을 암시하는 손패말까지 등장하고있으며 일부 시민들속에서는 《정보원규탄투쟁이 곧 통일운동이다.》는 구호까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제반 사실은 《국정원》해체, 현 《정권》심판이 남녘의 민심이라는것을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원과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러한 민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느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국정원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정보원이 감행한 선거개입책동을 덮어버리고 그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수집권세력은 그 무슨 《국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남조선 각계가 애타게 요구하는 정보원의 선거개입책동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담화록실종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떠들며 정보원으로 쏠린 현 국면을 담화록문제에로 또다시 끌고가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층은 담화록실종에 그렇게 관심이 높다면 담화록내용을 사

전에 류포시키고 그것을 서슴없이 공개해버린 정보원의 망동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사초 실종은 있을수 없고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것은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전 《참여정부》인사들과 민주당세력쪽으로 다시 화제를 돌리려고 꾀하고있다.

이것은 현 보수집권세력이 민심의 요구와 지향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정보원을 살려내어 그의 독재권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저들의 《정권안보》를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발버둥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알수 있게 한다.

정보원과 보수집권세력이 저지르고있는 이러한 기만술책들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그를 뚫아하는 또 다른 기만극들이 련이어

출현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어두운 그늘 밑에서 정보원의 독재권력은 더욱 횡포무도해져 남조선인민들은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지나온 남조선의 력대 정치사가 깨우쳐주는 교훈이고 진리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 1960년—1970년대에 남조선에서 일어난 부일장학회강제헌납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동백림간첩단사건》, 김대중랍치사건, 1980년—1990년대에 일어난 흑색선전물살포사건, 《국회529호실사건》, 새세기에 들어와 일어난 《왕재산간첩단사건》, 《녀간첩사건》, 유엔보고관미행사건 등은 모두 《유신정권》시기부터 오늘까지 그 간판을 바꾸어달며 악명을 떨치고있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정보원에 의해 감행된 주요사건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바로 정보원이 감행한 이 모든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력사의 증견자들이며 고발자들도이다.

이제 더는 정보원의 모략적이고 기만적인 놀음들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모략과 음모, 테로와 폭압의 본거지인 《국정원》은 《개혁》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할수 없듯이 현 집권세력이 정보원의 독재권력을 리용하여 저들의 집권 《안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정원개혁》과 같은 기만놀음을 벌려놓으며 갖은 발악을 다하여도 남조선인민들이 추켜든 정의의 초불은 악의 소굴인 정보원을 송두리채 불살라버리고야말것이다.



## 《국정원개혁》놀음의 정체

---

집	필	원	영	수				
장	정	박	봉	혁				
교	정	어	광	남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	쇄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	체	102(2013)년	8월	21일		
발	행	주	체	102(2013)년	8월	24일		

---